

지적과 질문

김진방(인하대 교수)

1. “정책비전과 의제”를 제안한다?

- 정책(政策)
 - 국어사전: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.
 - policy vs. policy measure
- 비전(vision)
 - 국어사전: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.
 - 영어사전: An ideal or a goal toward which one aspires.
- 의제(議題)
 - 국어사전: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.
- 과제(課題, mission)
 - 국어사전: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
- 목적(goal) 또는 목표(objective)로서의 ‘정책비전’
 - 실질적 기회평등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확장
 - 공정·상생·협동의 시장경제질서 확립
 - 함께 누리는 혁신적 성장
- 방책(measure)으로서의 ‘의제’ 또는 ‘과제’
 -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.0%에서 단계적 인상
 - 대형마트.SSM 신규 입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
 -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
 - 협력이익배분제(profit sharing) 활성화
 - 중소기업 공동 R&D기금 조성
 - 등등
- 그래도 남는 의문
 - ‘정책비전’의 선정 기준 또는 근거가 무엇인가?
 - 2013-2016년에 수행하려는 ‘과제’인가? 아니면 무엇인가?

2. ‘3대 정책비전’에 대한 분석

- 가치 체계로서의 ‘정책비전’
 - 열거된 가치(1): 기회의 평등, 공정한 과정, 정의로운 결과
 - 열거된 가치(2): 사회적 기본권, 상생과 포용, 협동, 공동체적 가치, 동반성장
 - 물음 1: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은 ‘결과의 정의성’의 필요조건인가? 다른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은 무엇인가?

- 물음 2: 상생, 포용, 협동은 동반성장의 수단인가? 아니면 필요조건인가? 아니면 (동반)성장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?
- 물음 3: 참여는?
- 제언: 윤리학의 도움을 받아 다시 구성 또는 기술해야 할 정책비전

- 경제 원리로서의 '정책비전'

- 물음 1: 자유주의 경쟁을 공동체주의 상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? 대체? 보완? 억제? 수정?
- 물음 2: “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”는 무엇을 위한 방책인가? 기회평등의 실질적 보장? 공정한 경쟁? 포용적 성장?
- 물음 3: “비정규직 차별 해소”는 무엇을 위한 방책인가?
- 제언: 공정경쟁 주장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달리 주장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 상생과 포용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?

3. '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'에 대한 재고

- 형식적 경제민주화?

- 경제민주화를 정치민주화와 비교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민주화를 형식과 실질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
- 경제 영역에서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며, 참여를 지향하는 것이 산업민주주의라 할 것임.

- 소유지배구조 개혁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로?

- 경제력집중의 핵심: 소수의 개인이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.배타적으로 지배
- 경제력집중의 두 측면: 총수일가의 지배력, 재벌그룹의 국민경제적 비중
-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에 초점을 맞추고, 출자총액 제한과 지주회사 행위 규제는 주로 재벌그룹의 확장에 초점을 맞춤
- “서민경제와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하는” 것은 재벌그룹의 확장 중에서도 ‘문어발식 확장’
- ‘문어발식 확장’은 상위 재벌그룹만의 행태는 아님
- 재벌개혁의 핵심 또는 목표가 ‘문어발식 확장’을 막는 것이어야 할까?

4. 노동문제

- 총선/대선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거나 의도적으로 피했던 노사관계 개혁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?
- 일자리의 질과 양은 trade-off 관계가 아닌가?